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 연구



오 박세훈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연구위원
✉ lawpark@klri.re.kr

I. 연구의 목적

1. COVID19로 인한 대면·접촉 등 기존의 사회생활 방식에 대한 온라인·비대면·비접촉 방식에서의 급속한 사회 변화

2002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H1N1), 2015년 메르스(MERS), 2019년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향후 반복될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다. COVID19는 대면·접촉·집회 등 기존의 사회생활 방식에 대한 위기감으로 인한 온라인·비대면·비접촉 방식에서의 급속한 사회 변화를 불러 왔으며, 생활방역¹⁾을 위한 생활 전반에서의 문화적·제도적 대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경제·산업·공공·문화 등 국민생활 전반에 있어, 대면 기반 서비스·활동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에 따른 서비스·활동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입법정책적 차원의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국민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COVID19 감염 위험으로 인한 모든 대인접촉 감소에서 개인 간 접촉의 단절로 이어졌다. 또한 감염위험으로 인한 운동·종교시설 등 출입·모임제한, 개학연기·온라인 개학, 자가격리에 따른 온라인쇼핑 급증 등 접촉·대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었다.

일상생활은 E-커머스 확대, 콜드체인, 홈코노미, 언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일하는 방식: 집단→개인, 다자간 소통, 원격교육, 화상면접) 등 편리함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정세 또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반세계화, 국수주의, 보호무역, 국제적 결속(정보교류) 등 세계화 시대의 상호개방과 국가와 지역을 넘어선 자유로운 사회적 교류왕래에 대한 제한과 국경과 지역의 격리 및 봉쇄로 국가 간의 상호 경계와 장벽치기 강화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파괴에 따른 국내 가치사슬의 재배치·재구조화로 전환되고 있다.

대면·접촉·집회 등 기존의 사회생활의 방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온라인·비대면·비접촉 생활방식에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상황은 대면·접촉 서비스 등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불가피한 대면 역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방역을 위한 생활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적·제도적 대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1) 공공보건포털, “‘아프면 3~4일 쉰다’ ‘사람간 두팔간격’... ‘생활방역’ 수칙 제시”, 2020.4.13.(검색일: 2021.2.16.). 생활방역이란 일상·경제생활과 방역을 조화시킨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말한다.



주요 분야별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E-커머스」 분야에서, 비대면·재택근무·홈코노미·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방식의 변경으로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쇼핑, 배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최소한의 비대면 배송을 실시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바로배송, 스마트픽 등 다양한 배송 서비스 또한 실시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새로운 특수고용²⁾,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근로자 보호³⁾의 이슈가 등장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실·출석 중심의 대면 수업의 감염·전파 위험성으로 ‘온라인 개학’ 실시, 비대면·재택 수업을 추진하였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 콘텐츠 수업 등 방송·통신교육 실시, 교실중심 학제 개편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학기별 190일(2/3이상 출석)의 수업일수와 수료기준 등 유연화, 균등 기회 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무 강화이슈가 부각되었다.

「의료」 분야는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의료인 피로도 증가와 자가 격리자 증가에 따른 자가격리 현황 점검 등 원격 의료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의료인 감염예방 및 이동·진료시간의 최소화를 위한 기본적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긴급 시 원격의료 허용, 웨어러블(Wearable) 의료장비의 활용 등 ICT기반의 지능형 의료 서비스의 확대와 전사·사변에 준하는 의료위기 시 공공의료체계의 보장, 마스크 등 개인의료장비 확보를 위한 제조·생산·보급 등 국가적 네트워크 확보가 중요해졌다.

「노동」 분야는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와 노동조건 변화로 인해, 화상회의, 업무 친화적 재택근무 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필요성 확대, 재택근무자 사생활 보호 및 육아·교육 병행 이슈가 대두되고, 네트워크 보안, 화상회의의 환경 조성 등 지능형근무 기반이 확충함에 따라, 노동자 감시, 사생활 침해, 재택근무자 임금 저하 방지, 재택근무자 일·가정양립지원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이 노동법제 개편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배송·택배 증가에 따른 일회용품 등 환경문제 잠재, 정보격차 심화 방지와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 정보화 취약계층의 비대면 소외 방지 등 역기능 최소화화 복지·환경·주거 등 필수생활 서비스의 안정적 유지 대응법제 구축의 필요성이 있으며, 일회용품 규제 무력화, 배송 폭증에 따른 물류환경 질적 저하가 우려되었으며, 개인화·1인 가구에 대한 서비스 증가에 따른 일회용품기 사용의 역기능 등이

급격한 사회 상황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근거에는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COVID19 상황이 전환을 더욱 급속하게 변화시켰다고 보고 있다.⁴⁾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적 관련 쟁점으로 오늘날 정부 역할은 작은 정부에서 요구되던 것보다 더욱 더 적극적·세부적 부분까지 강조되고 있으며, 그 역할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변화 일변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행위 형태도 종전 방식·틀과 달리 선제적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에 수반하여 법제도 재정비 및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Post COVID19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적 방법의 논의 및 행정절차적 보완 및 신설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행정절차 단축, 신규산업 선 진입 후 규제, 입법과정 간소화 등 국민생활·경제·산업·공공·문화 등 생활 전반의 대면 기반 서비스·활동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분야(e-러닝 또는 에듀테크 등) 및 의료분야(원격의료), 노동분야(스마트워크), 정치분야(전자투표), 상업거래(온라인쇼핑 및 배송 등) 등 분야별 비대면(Un-Tact)서비스에 대한 다면적 법제연구와 이에 수반하는 디지털포용성과 역기능방지(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등에 대한 COVID19 이후 뉴노멀(New Normal)에 대응하는 사회전반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법제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사회·경제 환경, 교육·의료 환경, 유통·서비스 환경 및 개별산업분야와 행정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방향 및 입법수요 파악과 전환을 저해하는 걸림돌에 대한 선제적 탐색 등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COVID19 이후 사회·경제 환경, 교육·의료 환경, 유통·서비스 환경 및 개별산업분야와 행정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사회 변화를 전망

COVID19 이후 사회·경제 환경, 교육·의료 환경, 유통·서비스 환경 및 개별산업분야와 행정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향 설정과 법적 정비 수요 파악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Post COVID19 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 2) 정홍준, “생활물류산업(택배·배달대행 및 이륜차 배송)내 특수고용 노동의 특징과 정책 대안”,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2020.7.
- 3) 박나리, 김교성,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 완화를 위한 법적 지위 규정 방안”, 한국사회복지학, 2020.11; 김은경, “COVID-19 사태 이후 플랫폼 노동자 지원방안”, 한국자치학회 공공정책 Vol.182, 2020.12; 박석진, “불안정하고 위험한 노동으로 내몰리는 중국의 플랫폼 배달노동자”,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20.10; 박정훈, “산재보험 없던 시절로의 회귀, 플랫폼 노동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0.6; Miriam A. Cherry,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 미국 캘리포니아주 AB 5법”,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20.5 등.
- 4)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중심사회편찬위원회,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2020년 회고와 2021년 전망」 27면, 2020.12.14..

입법정책적 대안 제시 및 Post COVID19 사회 대응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연구 개요는 아래와 같다.

부분별 포럼 운영을 통한 COVID19 이후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플랫폼 구축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전환에 대응한 법적환경 마련과 분야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학제적으로 전 분야를 관통할 수 있는 공법적 체계 마련이 되어야 한다.

II. 연구의 내용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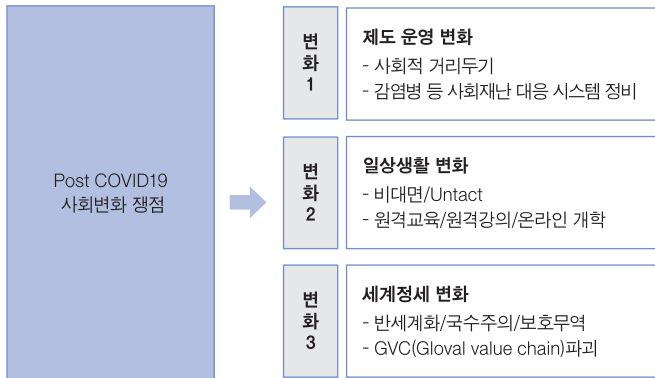
현재 2021년을 관통하고 있는 COVID19로 대면·접촉·집회 등 기존의 사회생활의 방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온라인·비대면·비접촉 생활방식으로의 급속한 변화로 대부분의 대면·접촉 서비스 등이 온라인으로 대체되

고, 불가피한 대면 역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방역을 위한 생활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적·제도적 대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 역할은 작은 정부에서 요구되던 것보다 더욱 더 적극적·세부적 부분까지 강조되고 있으며, 그 역할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변화 일변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행위 형태도 종전 방식·틀과 달리 선제적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에 수반하여 법제도 재정비 및 새로운 입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COVID19 이후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적 방법의 논의 및 행정절차적 보완 및 신설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생활·경제·산업·공공·문화 등 생활 전반의 대면 기반 서비스·활동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COVID19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입법 정책적 객관성과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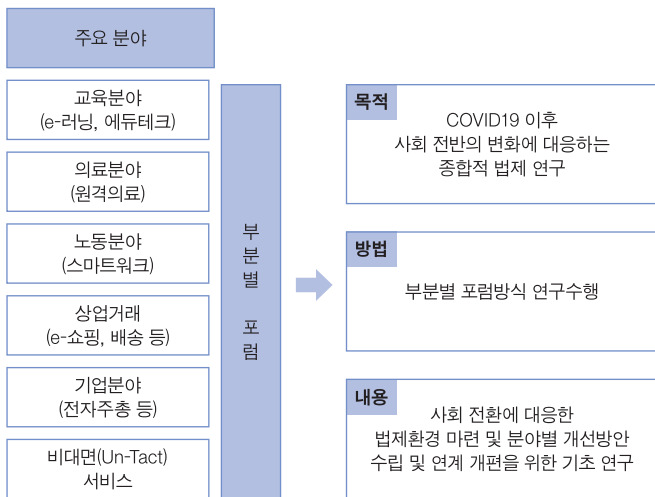
사회변화 대응



2. Post COVID19 사회변화에 따른 법제도방향 및 입법수요 파악의 필요성

COVID19 사회에서 이후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언택트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Post COVID19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사회의 전환과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사회로의 필수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른 Post COVID19 사회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코로나 이후 사회·경제 환경, 교육·의료 환경, 유통·서비스 환경 및 개별산업분야와 행정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변화를 전망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방향 및 입법수요 파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제도 방향 및 입법수요 파악



3. 교육분야, 노동분야, 돌봄분야, 사회적 취약계층, 상업거래 등의 주요 이슈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제시

Post COVID19 사회변화에 따라 부분별 이슈분석을 통해 교육분야, 노동분야, 돌봄분야, 사회적 취약계층, 상업거래, 전자상거래의 주요 이슈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일상생활·일하는 방식 및 형태에 대한 이슈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교육', '노동(재택근무)', '노동자 보호', '돌봄(아동)',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노인, 장애인)', '가족 관계'의 총 6가지 범주를 설정하였다. 이때 '노동'과 '노동자 보호'는 각각 '노동 환경', 즉,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자'라는 일하는 주체에 초점을 두고, 각 측면에서의 이슈를 살펴보았다. 한편 '돌봄'의 경우에는 대상을 아동으로 한정하여 COVID19에 따른 방과 후 돌봄과 가정 내 돌봄에서의 이슈를 살펴보았으며,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의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보호와 관련된 이슈를 도출하고자 한다.

경제활동·의료지원 방식 및 형태에 대한 이슈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상업거래', '전자상거래', '비대면 ICT서비스', '비대면 전자행정', '원격 의료 지원', '보건 의료 지원'의 총 6가지 범주를 설정하였다. '상업거래'는 택배 등 물류·배송과 관련된 측면에 초점을 둔 반면, '전자상거래'는 실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각 이슈를 살펴본다. 이와 달리 '비대면 ICT서비스'에서는 ICT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예, 금융, 문화 콘텐츠 등) 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한편 '원격 의료 지원'은 비대면 개인 의료의 측면에서, '보건 의료 지원'은 공적 의료 측면에서 중요한 각 이슈를 도출하고자 한다.

4. 부분별 포럼 운영을 통한 법제도방향 및 입법수요 파악

본 연구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으로서 부분별 포럼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환경, 교육·의료 환경, 유통·서비스 환경 및 개별 산업분야와 행정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방향 및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분야별 입법수요를 종합화한 입법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포럼 운영을 통해 Post COVID19 사회 전환을 저해하는 걸림돌에 대한 선제적 탐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정제할 것이다.

이를 통해 COVID19의 전반적인 이슈 분석·법제분석·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Post COVID19 사회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향 및 입법수요를 통해 도출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 마련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기대효과

본 연구는 부분별 전문가 포럼을 통해 향후 입법 수요를 조사하여 COVID19 이후의 입법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입법플랫폼의 구축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해 정부 관계부처 및 기관 담당자, 비대면비접촉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포럼 운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이와 함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포럼워크숍 등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적, 법제도적 사안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다. 즉,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COVID19 이후의 사회변화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사회부 부분별 입법플랫폼을 구축하고 적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별 입법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